

“마한유적 77% 전남...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최적지”

도, 광주시·전북·충남 등 4곳과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경쟁 6세기 독자적 문화 융성 밝히고 정비사업 국정과제 채택 주도

전국 마한유적 79곳 중 60곳(77%)이 몰려 있는 전남도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역사문화권을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센터 유치에 뛰어들 전국 지자체는 전남도를 비롯해 광주시, 전북, 충남 등 4곳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 이래 문헌 기록에서 잊힌 마한역사문화가 전남지역에서 6세기까지 독자적 문화를 꽃피웠다 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포함

한 종합 정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고, 충청·호남 마한권역에서 가장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센터 건립 최적지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마한 유적은 78곳으로 전남에 60곳이 있다. 그 다음으로 전북 10곳, 충남 5곳, 광주 3곳 순이다. 이중 전남의 마한 국가사적은 7곳으로 전국 사적 11곳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비지정 유적도 668곳이나 있다. 전남은 마한의 독자적 문화의 산물을 통해 6세기 중엽까지 독자적 정치체로 남

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역이다. 아 파트형 고분형식과 웅관묘, 금동관, 금동신발 등 가장 많은 마한 문화재가 지정돼 있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그간 마한문화권 학술대회와 마한문화행사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마한역사문화권 정책과 국고 지원을 지속 건의한 결과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2년 5월 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포

합한 ‘8대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육성’ 국정과제 채택을 이끌어냈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83억원을 들여 역사유적 조사 지원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전남에 유치해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재 활용 등 콘텐츠를 타워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용역업무 관리·운영 개선한다

종합 계획 마련·추진체계 정비

광주시는 용역관리 내실화와 용역과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종합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은 용역 △계획수립단계 △심의·수행단계 △평가·관리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으로 자체수행 가능여부와 과업지시서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의·수행단계에서는 사전실무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타당성·사업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추진부서

와 수행기관간 협치를 통해 연구품질을 향상시킨다. 평가·관리단계에서는 용역완료 뒤 외부 전문가 의무참여 평가단을 구성해 자체평가를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결과물의 정책반영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외부위탁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을 개선,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개선안 추진으로 용역운영 내실화와 관리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업무 수행 절차와 준수사항 등이 담긴 용역업무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말 관련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

광주 ‘에너지 소외’ 1만7023가구에 도시가스 설치

광주 외곽지역 등 1만7000여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미정(동구2·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이 전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경제성 미달 지역에 시 예산 범위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이용 취약 계층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광주 외곽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9.8%에 달하지만, 경제성 미달 등을 이유로 광주 전역 일부 농촌 마을에서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수는 총 1만7023곳(동구1857곳·서구1230곳·

남구2431곳·북구1965곳·광산구 9585곳)에 이른다. 박 의원은 “더 이상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재정적 부담만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소외지역별 단계적 도시가스 공급 확대, 마을형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도시가스 보급 등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가스 설치 분담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광주시 농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강수훈·김나운·심창욱·조석호·홍기월·신수정·임미란·심철의·박수가·안평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해나 기자



‘함평나비대축제 개막 성공 기원’ 나비 날리기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한 달여 앞둔 23일 이상의 함평군수와 운영팀 함평군의회 의장 등이 함평엑스포공원 내 수생식물관에서 성공적인 개막을 기원하며 나비 날리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내달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다. 나건호 기자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정치 기득권 내려놓기 위해 ‘방탄 국회’ 용어 삭제할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은 23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서약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병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염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다. 주호영·전봉민·조수진·이양수 의원은 이날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21곳 개보수 ‘최다 선정’

자연재해 피해 예방 기대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대상지 27개 지구 중 21개 지구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전남지역 신규 착수 대상지는 국가관리 3개 지구, 지방관리 18개 지구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방조제의 제방과 배수갑문·부속시설을 미리 보수·보강해 홍수, 태풍,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 시 시설물 붕괴와 파손을 예방하고 바닷물 유입을 막아 농경지를 보호한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6개 시·군 35개 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21개 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1268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착수하는 21개 지구 중 국가관리 방조제 3개 지구는 영암 지구, 보성 지구, 신안 태천지구다. 지방관리방조제 18개 지구에는 강진 장계2, 고흥 해내·송림·화도1·남성, 해남 목동·백포2, 신안 소동면·화랑·애미·저동·신촌1·일출·큰돌2·봉도유호·소당두·전광2·소포가전이다. 신규 지구는 설계 착수단계부터 전남도,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협력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세부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토록 할 방침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재해 예방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낙후 농업 기반시설 개선과 보수·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 국고예산 추가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방조제 936개 지구에 대해 1조 2375억원을 투입해 개보수사업을 추진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조례 전수 실태조사

광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조례특위)가 광주시와 시교육청 조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조례특위는 전남 시 기획조정실장, 시교육청 정책국장 등과 제3차 조례특위 회의를 했다. 조례특위는 시행 중인 시청 소관 조례 799건, 시교육청 181건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하고 조사 목록을 확정했다.

특위는 조례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시의회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다운 조례특위 위원장은 “전수조사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고 유사·중복 조례는 통합합, 불필요한 경우 폐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